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1991. 4. 24

朴 英 圭(國際研究室 前任研究委員)
姜 元 植(國際研究室 責任 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目 次

1.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	3
가. 東北亞 秩序 再編의 가속화	3
나. 北方領土問題 해결의 진전	4
다. 아·태 지역 多者間 協議體 구성 가능성 難望	6
라. 北韓의 核査察問題 해결을 위한 對美 協商 적극화	7
마. 韓半島 平和定着의 진전	9
2. 韓國의 考慮事項	10
가. 東北亞 秩序 再編의 가속화에 대비	10
나. 韓半島 非核地帶化 논의의 구체화 가능성	10
다. 韓半島 軍備統制 논의 가능성 증대	11
라. 韓半島 문제 해결을 위한 多者間 會議 개최 논의 활성화 ...	11
마. 韓·蘇 관계 증진에 따른 韓國의 외교적 부담	12
바. 韓·蘇 관계 증진에 따른 韓國의 국내정치적 부담	12
(附錄)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14

빈 면

1.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4. 16~4. 20간 일본과 한국을 방문, 가이후(海部俊樹) 일본 수상 및 盧泰愚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는 바, 이번 韓·蘇, 日·蘇 頂上會談이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음(회담 결과는 附錄 참조).

가. 東北亞 秩序 再編의 가속화

- (1) 세계적 화해추세와 소련의 적극적인 아·태 진출정책으로 진전되고 있는 東北亞 國際秩序의 재편과정은 1989. 5 中·蘇 관계정상화, 1990. 9 韓·蘇 수교, 北韓의 對美·日 접근 등 일차적으로 域內國家間 兩者關係의 재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번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극동방문으로 마련된 日·蘇 관계개선 가능성 증대와 韓·蘇 관계 긴밀화는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東北亞 秩序 再編을 가속화시킬 것임.
- (2) 蘇聯의 아·태 적극 진출정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蘇聯經濟의 위기 타개와 시베리아 개발을 위해 아시아국가들의 협조를 획득하고, 21세기의 주역으로 등장할 아·태지역의 繁榮에 동참함에 있음. 한편 蘇聯은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日本의 협조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식함. 따라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번 극동방문은 中·蘇 관계정상화와 韓·蘇 수교를 바탕으로 對日 관계개선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蘇聯의 아·태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3) 한편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극동방문을 기점으로 日·蘇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고, 韓·蘇 협력관계가 증진되는 등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동북아 양자관계의 재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韓·中 국교수립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며, 東北亞 域內 國家間 兩者關係에서 개선되지 않은채로 남게 될 北韓의 對 美·日 관계도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재조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동시에 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하여 南北韓 관계개선의 긍정적 주변환경 조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나. 北方領土問題 해결의 진전

- (1) 日·蘇間 관계정상화의 최대 장애인 북방영토문제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訪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한이었으나, 이번 일·소 정상회담에서 소련이 북방영토문제의 존재를 공식 확인하고 북방4도 주둔 蘇聯軍의 철수 또는 감축을 제안한 것은 日·蘇 양국관계의 진일보로 평가됨.
 - 양국 共同聲明에서는 북방4도의 일본 주권 확인은 물론 2도 반환 가능성 시사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 따라서 영토문제에 관한 이번의 일·소 공동성명은 일·소 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고려, 적정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즉 日本의 입장에서는 영토문제의 존재를 공식화하고 해결을 위한 본격적 교섭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성과를, 그리고 蘇聯의 입장에서는 반환 약속을 회피한 채 日本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함으로써 對日 關係改善과 경험 획득 가능성 증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 蘇聯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하여 北方領土問題의 존재를 확인하고 향후 양국관계 개선과정에서 영토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線에서 타협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에 근

거하고 있음.

- 종래 美國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의 基地인 캄차카半島의 페트로파블롭스크에 이르는 補給路 확보라는 차원에서 에토로후海峽이 중시되었으나, 최근 SSBN 탑재 미사일의 사정거리 확대로 오호츠크海에서의 발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北方4島의 군사적 가치는 저하됨.
- 日本의 對蘇 협력은 소련경제 및 소련의 아·태 진출에 필요불가결한 반면, 日本은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對蘇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政經不可分」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따라서 蘇聯은 북방영토 양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3) 한편 북방4도에서의 소련군 감축 또는 철수 제안은 그것이 우선 北方領土의 非軍事化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진전을 의미함. 일본은 이러한 북방4도의 비군사화에 대하여, 소련 군사력이 일본 연해에서 철수한다는 점에서는 물론, 북방4도의 비군사화가 북방4도의 일본 반환을 위한 첫단계 조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향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임.

(4) 그러나 북방4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여전히 중시하는 蘇聯 軍部勢力의 상존, 蘇聯의 北方4島 반환이 야기시킬 소련내 領土 및 民族紛爭 등 부정적 효과, 그리고 고르바초프 권력 기반에 대한 강경보수파와 급진개혁파의 도전과 같은 國內政治的 不安定 要因에 비추어,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소련의 획기적인 對日 讓步 가능성은 현재 희박함.

(5) 따라서 日·蘇 양국관계가 東北亞 秩序 재편과정 속에서 점

진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北方領土問題가 兩國間 公式協議 對象으로 상정되어 협의가 계속될 것이나, 日·蘇 관계가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기본입장 차이로 단기간에 平和條約 체결을 통해 正常化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 아·태 지역 多者間 協議體 구성 가능성 難望

(1) 이른바 「東京독트린」에서 제시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아·태 안보구상은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표명된 아시아集團安보구상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1986. 7 블라디보스톡演說에서의 「아시아版 헬싱키會談」, 1988. 9 크라스노야르스크演說에서의 「全아시아 안보협력회의」, 1989. 5 北京演說에서의 「全아시아過程」 및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1990. 9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의 「汎아시아 포럼」 제의 등)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유럽安보協力會議(CSCE)와 같은 多者間 協議機構를 아·태지역에서 창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임.

(2) 그러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번 제의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日本이 거부함에 따라 共同聲明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美國도 「신선미가 없다」는 이유로 즉각 거부함.

- 즉 美·日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번 제의가 과거의 것과 다른 바 없는 구태의연한 것이며, 蘇聯이 다자간 협의기구 창설을 주장함으로써 美·日에 대한 평화공세를 강화, 美國의 해군력 삭감을 노리고, 아·태 지역에 본격 진출하여 이 地域에서의 경제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는 등 궁극적으로 美·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또한 中國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서 中國이 3國會議(美·日·蘇)가 아니라 2단계인 5國會議(美·日·蘇·中·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中國이 日本 보다 중요하지 않게 취급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아시아版 안보협력회의(CSCA)를 창설하려는 움직임은 적어도 日·蘇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아·태 지역에서의 多者間協議의 진전 여부는 日·蘇 관계 보다는 아·태지역에서의 美·蘇 관계개선에 따라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라. 北韓의 核査察問題 해결 위한 對美 協商 적극화

- (1) 北韓의 핵사찰문제에 대한 日·蘇 공동성명의 요구는 북한정부에 의해 즉각 거부됨. 이와 관련, 蘇聯은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할 경우 核제조와 관련한 기술 및 연료의 對北韓 협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北韓이 현재 핵사찰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함.
- 北韓은 지금까지 南韓內의 美軍核의 존재를 문제시하여 왔으며,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주장하여 왔음. 따라서 주한미군의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蘇聯의 핵사찰 추구하고 핵지원 중단 만으로 北韓이 핵사찰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함.
 - 美國은 北韓의 무조건적인 핵사찰 수용 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므로 소련의 핵사찰 추구하고 핵지원 중단 만으로 北韓이 핵사찰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함.
 - 한편 金日成은 4. 19 日本 마이니찌新聞과의 인터뷰에서 駐韓美軍의 핵이 상존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北韓에 대한 일방적인 핵사찰은 「도리에 맞지않는 부당한 행위」라고 반발함.

(2) 그러나 社會主義圈의 본질적 변화에 따라 고립되고 있는 北韓은 美·日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바, 北韓의 對서방 관계개선은 일차적으로 對美 관계개선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앞으로 北韓이 對美 관계개선을 위하여 핵사찰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北韓이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그 결과 蘇聯의 핵지원이 중단될 경우, 北韓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임. 蘇聯 대신에 中國으로부터 핵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의 동북아 정세와 對美 협조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희박함. 또한 北韓이 독자적인 플루토늄 가공 및 핵무기 생산 추진 가속화의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北韓의 기술수준이나 경제능력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이번 韓·蘇 정상회담에서 蘇聯이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공식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美國이 완강히 반대하는 한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北韓의 핵사찰을 선행시켜 美國을 만족시킨 후 궁극적으로 韓半島 非核地帶化를 추진하겠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韓半島問題 해결을 위한 蘇聯의 강력한 意志를 나타내고 있음.

(3) 따라서 北韓이 蘇聯의 핵사찰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蘇聯의 강력한 意志에 비추어, 北韓은 핵사찰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지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對美 協商을 적극화하는 한편 蘇聯에 대하여 對美 설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 韓半島 平和定着의 진전

- (1) 蘇聯은 앞으로 韓半島問題 解決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임. 蘇聯은 아·태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南北對話의 진전과 韓半島 平和定着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이번 극동방문에서 표명된 각종 발언에서 반영되고 있음.
 - 이와 관련, 韓·蘇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年內 남북한 방문이 시사되었듯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핵사찰 요구로 궁지에 몰리게 된 北韓을 위무하고,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の 발판이 될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만간 北韓을 방문할 것이며, 蘇聯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재자로서 본격적인 역할 수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2) 南北韓問題의 해결은 當事者間 對話와 交流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總理會談 등 의미있는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韓·蘇·日 頂上間의 공동인식은 南北對話 진전에 기여할 것임.
- (3) 한편, 韓·蘇 정상회담에서 韓國의 유엔가입 원칙이 확인되고, 최근 國際社會에서 유엔의 役割이 증대됨에 따라 北韓이 유엔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수정, 유엔 加入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4) 이에 따라 北韓의 핵사찰문제 및 유엔가입문제 등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대화와 조정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南北韓間 直交易은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임. 이와 동시에 「韓半島問題의 國際化」 추세도 가속화되어 北韓의 對美·日 접촉과 蘇聯의 對北韓 변

화 촉구는 韓半島 平和定着과 統一을 위한 基盤 조성에 기여할 것임.

2. 韓國의 考慮事項

韓國은 이번 韓·蘇, 日·蘇 정상회담에 따른 上記와 같은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감안, 다음과 같은 事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가. 東北亞 秩序 再編의 가속화에 대비

- (1)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극동방문은 소련의 아·태 진출정책 적 극화를 예고하는 바,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을 가속시킬 것임.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재편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변화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韓國의 바람직한 位相 정립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2) 특히 금년 5월 李鵬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과 江澤民 총서기의 소련방문으로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 中國이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 바, 韓國은 對중국 수교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사찰과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관한 中國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르바초프·江澤民 회담에서 韓半島問題가 주요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韓國은 한·소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을 中國이 동의할 수 있도록 蘇聯이 노력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나. 韓半島 非核地帶化 논의의 구체화 가능성

- (1)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 또는 제거와 함께 아·태 지역의 非核地帶化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 동북아의 경

우 韓半島와 日本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으며, 이는 北韓의 韓半島 非核地帶化 주장과 더불어 駐韓美軍 철수 문제로 연결되고 있음.

- (2) 따라서 향후 美國의 동북아 군사력 재편과 美·蘇間의 군사적 절충, 그리고 美·北韓 접근과정에서 韓半島 非核地帶化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주한 미군의 단계적 감군이 결정된 현상하에서 美國은 고립된 北韓에게 긴장완화의 명분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 韓半島 軍備統制 논의 가능성 증대

이론적으로 볼 때 韓半島에서의 軍備統制는 동북아 4강의 군사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아·태 安保體制와의 관련 하에서 그 下位體系로서 이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임.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아·태지역의 주요세력들이 軍備統制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韓半島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도 큰 바, 이 경우 韓半島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軍備統制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駐韓美軍 減縮이 현재보다 더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임.

라. 韓半島 문제 해결을 위한 多者間 會議 개최 논의 활성화

韓·蘇 수교, 日·北韓 및 韓·中 수교 가능성 증대, 日·蘇 관계개선 가능성 증대 등 최근 東北亞地域에서의 급격한 兩者關係 증진에 비추어 보아, 韓半島問題 해결을 위한 多者間 會議 개최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큼. 이와 관련, 특히 蘇聯의 적극적인 제의 및 추진이 예상됨.

마. 韓·蘇 관계 증진에 따른 韓國의 외교적 부담

- (1) 고르바초프 이니셔티브는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安
保秩序 재편과 이에 따른 美國의 영향력 약화를 겨냥하고
있는 반면, 美國은 현재 同地域에서의 現狀維持 정책을 고수
하고 있으며 이러한 美國의 입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초강대국 간의 상반된 정책은 韓國 安保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韓·美 안보관계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
고 있음. 특히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은 궁극적으로 南北韓
양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수
립·추진될 것임을 감안할 경우, 韓·蘇 수교는 蘇聯의 自國
政策에 대한 韓國의 지지 및 동참을 강요하는 對韓國 압력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韓·美 안보관계 유지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음.
- (2) 이와 관련, 韓國은 특히 이번 韓·蘇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
프 대통령이 제안한 韓·蘇 友好協力條約 체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同條約이 갖는 국제법적 구속력과 정치·외교적
의미를 고려하여 韓·美 條約 등 선린우방과의 기존 관계와
배치되지 않는 주도면밀하고 세심한 정책적 배려 위에 同조
약 체결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바. 韓·蘇 관계 증진에 따른 韓國의 國內政治的 부담

- (1) 고르바초프 이니셔티브가 강화되고 駐韓美軍 및 韓半島 非
核地帶化 문제가 美·蘇間에 동북아 군사문제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韓國內에서는 현실적인 안보상황이 변화
된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고르바
초프 대통령이 독창적인 提案을 통하여 일거에 주한미군 및

한반도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이는 韓國의 國內輿論을 자극함으로써 韓國의 對북한 및 對 주변국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2) 蘇聯의 對아·태 지역 평화공세 강화, 韓·蘇 수교 및 韓·中, 日·蘇 관계 증진에 따라 향후 北韓이 對南 평화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韓國內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韓國의 합리적인 對북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附錄)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1. 日·蘇 頂上會談 結果

4.16~19간 개최된 日·蘇 정상회담의 결과 4. 19 발표된 共同聲明은 日·蘇 관계개선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온 北方領土問題의 존재를 인정하고, 영토문제의 대상으로 하보마이(齒舞), 시코탄(色丹), 쿠나시리(國後), 에토로후(擇捉) 등 4개 도서의 이름을 명기하여,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국이 공동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함. 이와 관련, 蘇聯側은 상기도서에의 일본주민의 無비자 통행, 일본주민과 상기 도서 住民 간의 교류 확대, 호혜적 경제활동 개시, 주둔 소련군의 감축 등을 제안함.

- 동시에 日·蘇 공동성명은 한반도 긴장완화책으로 南北對話의 진전이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 위에 南北高位級會談의 계속을 지지하고, 北韓이 國際原子力機構(IAEA)와 核안전보장협정을 신속히 체결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韓·蘇 국교수립과 日·北韓 간의 관계정상화 노력을 韓半島의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환영함.
-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4. 17 일본 衆議院 本會議場 演說에서 아시아지역국가 간의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軍縮의 촉진과 協力關係 강화를 위하여 蘇·美·日 간의 3국회의 개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多者間 협의기구 창설을 위하여 蘇·美·日·中·印 간의 5국회의 개최, 東北아시아·東海(일본해) 水域의 안전보장과 協力地帶의 창설을 주장하고, 동시에 93년 아·태 外相會議 개최를 재차 제안하는 등 이른바 「東京독트린」을 발표함.
- 또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同연설에서 소련의 軍縮結果를 밝히면서, 중거리핵전력(INF) 전폐조약에 의거, 소련아시아지역에서

424기가 이미 폐기되었으며, 1991년 중반까지 추가로 166기가 폐기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또한 1991년까지 소련동부병력 20만 명 삭감과 극동지상군 12개 사단 및 11개 항공연대 해체가 완료되며, 금후 태평양함대의 대형수상함 9척, 잠수함 7척 등 16척이 퇴역한다고 강조하는 등 평화공세를 강화함. 더불어 금년 여름 실시예정인 소련 태평양함대의 군사연습에 외국군의 움저버를 초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訪日을 수행한 베스메르트니흐 소련 외상은 나카야마(中山太郎) 일본 외상과 4. 18 日·蘇 양국간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협력 및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15개 문서에 서명함.

2. 韓·蘇 頂上會談 결과

- 4. 19~20간 한·소 제주도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北韓이 IAEA와 核안전협정을 체결, 국제적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본 방문시의 입장을 확인함. 동시에 韓國의 유엔가입문제와 관련, 南北韓 同時加入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북한이 계속 불응할 경우 韓國의 單獨加入이 불가피하다는 盧대통령의 입장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유엔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이해를 표명하였으며, “한국의 유엔가입문제에 관해 이미 中國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中國도 북한의 단일의식 가입안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함.
-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盧泰愚 대통령은 韓·蘇 양국관계의 역동적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안한 韓·蘇 友好協力條約 체결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양국 外務長官會談을 통하여 협의하기로 함.
- 또한 兩國 頂上은 양국간 經濟協力 등 실질협력분야에서 소련의 첨단과학기술과 韓國의 생산기술을 결합하고 韓·蘇 기업의 간

의 합작투자를 촉진하며 東시베리아지역 등의 천연가스·석유·지하자원·삼림개발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韓國企業이 참여하는 문제에 관해 양국정부가 구체적인 협의를 전개하기로 합의함. 이와 관련, 양국 經濟長官會議에서는 1991년 교역량을 15억 달러로 늘리고, 90년대 중반에는 100억 달러로 증대시킬 것에 합의함.

- 한편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記者 간담회를 통하여 年內 남북한 동시방문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함.